

2021년 소방간부후보 행정학 (2021.1.16.)

• 해설 : 이승철

01 미국 행정학의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이먼(Simon)은 초기 행정학의 과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논리실증주의 방법에 의한 행정 원리의 도출을 주장하였다.
- ② 뉴딜(New Deal)정책을 통해 행정부의 역할과 규모가 확대되면서 정치와 행정의 구분은 비현실적인 것이 되었다.
- ③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 운동은 기존의 능률 지향적이고 가치중립적인 행정학의 적실성 부족을 비판하면서 가치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 ④ 정책과학은 사이먼의 행태주의와 의사결정이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서 수학과 컴퓨터를 활용하여 고도의 계량적인 접근 방법을 추구하였다.
- ⑤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기업가적 정신 등 사기업 경영원리의 도입을 추구하였다.

해설

- ④ (×) 행태주의는 가치중립적인 과학적·실증적 연구로 인해 사회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반해 탈행태주의(후기행태주의)는 현실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 처방적 지식을 탐구하는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하는 입장으로, 정책과학(1970년대)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답 ④

[관련기출] 후기행태주의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2 해경간부

- ㉠ 정치체계론자 D. Easton에 의해 행정학에 도입되었으며, 비관행정학이나 담론이론 등 후기산업사회 행정이론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 배경은 1960년대 미국에서의 대규모 흑인폭동, 베트남 전쟁의 계속과 이에 대한 반전데모 등 미국 사회의 혼란이라고 볼 수 있다.
- ㉢ 가치중립적인 과학적·실증적 연구보다는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하는 입장으로, 정책과학(1970년대)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 ㉣ 주지주의(主知主義)가 아닌 주의주의(主意主義), 객관주의가 아닌 주관주의를 표방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답 ④

02 신공공관리론에서 중요시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과의 기준과 측정 ② 투입보다 산출 강조 ③ 고객 지향적인 정부
- ④ 분권적 정부 ⑤ 공유재의 비극

해설

- ⑤ (×) 공유재의 비극 또는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적 합리성의 추구가 사회적·집단적 합리성으로 연결되지 못함을 설명하며, 시장(민간)의 자유방임 상황에서 둘 경우 개인의 이기적 성향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시장실패를 초래하므로 정부개입이 필요함을 뒷받침해주는 이론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므로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 공유재의 비극과는 거리가 멀다.

■ 오스본과 게블러(D. Osborne & T. Gaebler)의 『정부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 1992)』 기업가적 정부운영의 10대 원리

구분	전통적 관료제	기업가적 정부(entrepreneurial government)	
정부역할	노젓기(rowing), 사공	⇒ 방향키(steering), 조타수	촉매적·촉진적 정부
정부활동	서비스 직접 제공(serving)	⇒ 지역사회 권한 부여(empowering)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서비스 공급 방식	서비스의 독점적 공급(monopoly)	⇒ 경쟁 도입(competition)	경쟁적 정부
	행정메커니즘(인위적 질서체제)	⇒ 시장메커니즘(자율적 질서체제)	시장지향적 정부
관리기제	규칙·규정 중심 관리(role-driven)	⇒ 임무·사명 중심 관리(mission-driven)	사명·임무중심 정부
관리방식	투입 중심 예산(budgeting-inputs)	⇒ 성과·결과 중심 예산(funding outcomes)	결과[성과]지향 정부
	지출 지향(spending)	⇒ 수익 창출(earning)	기업가적 정부
	사후 치료·치유(cure)	⇒ 예측·예견과 사전예방(prevention)	미래지향적·예견적 정부
	집권적 계층제(명령·통제)(hierarchy)	⇒ 분권·참여·팀워크(participation/teamwork)	분권적 정부
주체·책임성	관료(행정)중심	⇒ 고객(국민)중심(customer driven)	고객지향 정부

답 ⑤

03 공무원의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적으로 부여된 직무 수행상의 의무와 사인으로서 개인의 이익 간의 충돌이다.
- ② 잠재적 이해 충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③ ‘회피’를 통하여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의 충돌을 해소할 수 있다.
- ④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차를 두고 이해 충돌이 부패행위로 발현될 수 있다.
- 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기관 자문활동을 금지함으로써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

- ⑤ (○) 타자성은 파머(D. Farmer)의 반관료제론의 내용으로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관찰대상에 불과한 인식적 객체로서가 아니라, 자신과 언제든지 소통과 교류가 가능하고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도덕적 타자(moral other)로서 인정하는 것이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모더니즘	통합	분화 (분업)	구심적/획일화/집중화 /전체성/질서	이성	절대주의, 보편주의 근원주의, 근본주의	과학주의 객관주의	안정된 존재와 결과 중심	집단주의 획일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분열 다양화	탈분화 (협력)	원심적/다원화/분산화 /파편성/무질서	감성 정서	상대주의, 다원주의 맥락의존성	구성주의 주관주의	행동과 과정 중심	해방주의

모더니티 행정이론과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의 비교

모더니티 행정이론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
합리성 강조	상상 강조 → 규칙에 얽매이지 않으며 특수성 인정
행정이론의 보편성, 과학주의, 합리적 해석에 대한 우월적 지위 인정	과학적 지식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음 → 끊임없는 대안 모색
행정이론과 실무에서 주장되는 설화·텍스트 인정	행정이론과 실무에서 주장되는 설화·텍스트 해체
대상영역의 한정	학문 간 경계의 해체
주체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	주체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 부족
대의민주주의의 책임성의 환류선	진정한 담론의 활성화(국민 의사의 반영이 중요), 심의민주주의
전통 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Farmer 반관료제론, Fox와 Miller의 담론이론, 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론

답 ③

[관련기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이 아닌 것은?

2017 행정사

- ① 상상(imagination) ② 탈영역화(deterritorialization) ③ 은유(metaphor) ④ 과학주의(scientism) ⑤ 해체(deconstruction)

답 ④

[관련기출]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0 경찰승진

- ① 타자성의 개념은 행정조직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공동체권력에 기초한 시민참여이론을 수용할 수 있게 한다.
 ② 탈영역화의 개념은 타인을 하나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도덕적 타인으로 인정하고 개방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③ 세계관은 상대주의적·다원주의적·개방주의적 경향을 지닌다.
 ④ 과학주의와 기술주의의 한계와 부작용을 비판한다.

답 ②

07 조직이론에 관한 다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독립변수를 특정하고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화 해 제한된 범위 내의 일반성과 규칙성을 발견한다.
 ② 대리인이론은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고 전제한다.
 ③ 거래비용이론에서 거래비용이란 탐색비용, 이행 및 감시비용 등을 포함한다.
 ④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을 환경에 의존하는 피동적 존재로 본다.
 ⑤ 조직군생태론의 분석단위는 단일조직이 아니라 조직군이다.

해설

- ① (○) 상황이론은 고찰 변수를 특정 환경에서의 적합한 조건으로 한정하고 복잡한 상황조건을 유형화하여 분석의 틀을 단순화한 중범위 이론이다(추상적인 거시적 이론이 아니며, 조직 내부의 집단·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미시적 이론도 아님).
 ④ (×) 조직을 환경에 의존하는 피동적 존재로 보는 것은 결정론적 시각의 조직이론이다. 자원의존이론은 임의론적 시각의 이론으로서 어떤 조직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모든 자원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조직이 환경적 요인을 피동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조직 내의 대내적·정치적 맥락에서 조직의 환경적응을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린다는 이론이다.

답 ④

[관련기출] 거시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 경찰승진

- ① 거래비용이론은 거래비용이 높아지면 기업 내 위계조직 설립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한다.
 ② 구조적 상황이론에서는 조직이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면, 효과적인 조직설계 및 관리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주도적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그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려는 존재로 본다.
 ④ 대리인이론에서는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엄격한 평가에 바탕을 둔 인센티브 제도를 강조한다.

답 ①

[관련기출] 상황론적 조직이론과 자원의존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5 서울9급

- ① 자원의존이론은 어떤 조직도 필요로 하는 자원을 모두 획득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②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조직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③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환경에 의존하므로 조직을 환경과의 관계에서 피동적 존재로 본다.
 ④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효과적인 조직설계와 관리방법은 조직환경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답 ③

[관련기출] 거시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9 서울7급(2)

- ㉠ 공동체 생태학이론은 조직의 내적 논리를 강조한다.
- ㉡ 자원의존이론은 환경에 파동적인 조직의 특성을 강조 한다.
- ㉢ 구조적 상황이론은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의 구조 설계를 강조한다.
- ㉣ 조직군 생태학이론은 조직의 주도적 선택을 강조한다.

답 ③

[관련기출] 거시조직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019 경찰간부

- ㉠ 구조적 상황론에 따르면 환경의 영향에 대한 조직관리자의 역할이 수동적이다.
- ㉡ 자원의존이론에 따르면 조직은 주도적·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그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려 한다.
- ㉢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 ㉣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시장의 자발적인 교환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관료제의 조정비용보다 클 경우 거래를 외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 전략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조직구조의 변화가 외부환경 변수보다는 조직 내 정책결정자의 상황판단과 전략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답 ②

08 다음 중 OJT(On-the-job Training)의 프로그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턴십(internship) ② 직무순환(job rotation) ③ 역할 연기(role playing)
- ④ 실무지도(coaching) ⑤ 임시배정(transitory experience)

해설

구분	현장훈련(직장훈련)(OJT ; On - the - Job Training)	교육원훈련(OFF JT ; Off - the - Job Training)
의미	피훈련자가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감독자나 선임자로부터 직무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	교육훈련만을 목적으로 특별히 마련된 장소와 시설에서 예정된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
예	실무지도, 직무순환(전직·전보), 임시배정(임시대역), 실무수습(internship), 시보	강의, 회의·토론, 사례연구, 역할연기, 분임토의, 모의실험, 감수성훈련, 시찰·견학 등

답 ③

[관련기출] 교육훈련의 종류를 OJT(On - the - Job Training)와 OFFJT(Off - the - Job Training)로 구분할 때 OJT의 주요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9 서울9급(1)

- ① 인턴십(internship) ② 역할연기(role playing) ③ 직무순환(job rotation) ④ 실무지도(coaching)

답 ②

[관련기출] 평상시 근무하면서 일을 배우는 직장 내 교육훈련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5 서울9급

- ① 실무지도 ② 인턴십 ③ 직무순환 ④ 감수성훈련

답 ④

09 역량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추측이나 유추가 아닌 직접적 관찰을 통해 역량을 평가한다.
- ② 성과에 대한 외부 변수를 통제하여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
- ③ 다양한 실행과제를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
- ④ 다수의 평가자가 합의를 통해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개별 평가자의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⑤ 성취된 업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피평정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설

- ⑤ (×) 역량평가는 대상자의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한다. 성과에 대한 대외 변수(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통제하여 환경적 변인을 제거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역량평가는 성과급 지급기준으로 활용되지 않음).

■ 역량평가와 근무성적평정의 차이

구분	목적	평가내용	보상	주체	성격	대상
역량평가	미래 잠재력을 사전에 검증	역량(조직 성과 창출을 위한 자질)	없음	역량평가단	비교적 객관적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임용 전
근무성적평정	과거 실적을 사후에 평가	근무실적·능력·태도 등	있음(성과급과 연계)	상급자	주관적	전체 공무원(경력직)

답 ⑤

☞ 역량평가의 특성과 기대효과

기존의 다면평가나 인터뷰, 서류심사 방식의 평가체계와는 상이한 특성을 지님.

- ① 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적 직무 상황에 근거한 행동을 관찰·평가**. **추측·유추가 아닌, 직접 나타난 행동들을 관찰**함으로써 평가자의 주관성을 배제(평가센터법 활용).
- ② 대상자의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 성과에 대한 대외 변수를 통제하여 환경적 변인을 제거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
- ③ **다양한 실행과제를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개별 평가기법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상자들의 몰입을 유도하며, 다양한 역량의 측정 가능.
- ④ **다수 평가자가 참여하여 합의에 의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하므로 개별 평가자의 오류 방지, 평가의 공정성 확보.
- ⑤ 고위공무원단 진급과 과장급 임용 전에 후보자의 자질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과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의 **선발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무원에게 자기 개발 동기와 유인을 제공.
- ⑥ 역량평가의 결과 나타난 개인별 역량수준은 **구체적인 교육훈련 수요를 제공해주므로 개인별 맞춤형 교육훈련**이 가능해지고 교육효과 극대화.
- ⑦ 고위직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국정수행능력 향상에 기여, 정부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

[관련기출] 역량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6 서울9급

- ① 역량평가제도는 근무 실적 수준만으로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역량평가제도는 대상자의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고, 성과에 대한 외부 변수를 통제하지 않는다.
- ③ 역량평가제도는 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설정한 뒤 현실적 직무 상황에 근거한 행동을 관찰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 ④ 역량평가는 한 개의 실행 과제만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답 ③

[관련기출] 역량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7급(인사·조직론)

- ① 단순한 근무실적을 넘어 해당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 ② 역량평가센터를 활용한 역량평가는 도입되지 않았다.
- ③ 성과에 대한 외부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개인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한다.
- ④ 역량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는 고성과자의 차별화된 행동특성과 태도를 의미한다.

답 ②

[관련기출] 역량평가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014 사회복지9급

- ㉠ 일종의 사전적 검증장치로 단순한 근무실적 수준을 넘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 ㉡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이뤄지며 그 결과는 승진과 성과급 지급, 보직관리 등에 활용된다.
- ㉢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 내외의 모든 사람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려는 강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다수의 평가자가 평가하는 체계이다.
- ㉤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하는 것이며 성과에 대한 외부변수를 통제함으로써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답 ②

10 다음 중에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어 조직 내 인간을 도외시하고, 조직의 비인간화, 인간성의 파괴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는 이론이 아닌 것은?

- ① 테일러(Taylor)의 과학적 관리론 ② 패이올(Fayol)의 산업관리론
- ③ 굴릭과 어윅(Gulick & Urwick)의 행정관리론 ④ 베버(Weber)의 관료제론
- ⑤ 아지리스(Argyris)의 성숙-미성숙이론

해설

- ①②③④는 고전적 조직론이나 행정관리론과 관련되며 X이론적 인간관, 경제인관, 외재적·타율적 통제, 일방적 지시·명령 등을 강조한다.
- ⑤ 아지리스의 성숙-미성숙이론은 성장이론, Y이론, 자아실현적 인간관, 내재적·자율적 통제, 참여·협력·팀워크 등을 강조한다. 아지리스는 고전적 조직원리에 입각한(X이론적인) 공식조직의 관리전략(관료적 피라미드형 관리)은 인간을 미성숙상태에 있게 하며, 수동적·의존적·타율적 존재로 만들게 된다고 비판했다. 조직과 개인간 갈등의 악순환을 극복하고 조직목표와 개인목표의 통합을 이루는 인간적·민주적인 Y이론적 관리를 강조했다.

답 ⑤

[관련기출] 행정관리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지방9급

- ① 대표적인 학자로는 굴릭(L. Gulick), 어윅(L. Urwick), 패이올(H. Fayol) 등이 있다.
- ② 비공식 집단의 생성이나 조직 내의 갈등 등에 대한 설명을 용이하게 해준다.
- ③ 과학적 관리론, 고전적 관료제론 등과 함께 행정학의 출범 초기에 학문적 기초를 쌓는데 크게 기여했다.
- ④ 조직과 구성원 간의 관계를 합리적 존재로만 봄으로써 조직을 일종의 기계 장치처럼 설계하려 하였다.

답 ②

11 조직모형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전구동형 조직의 핵심은 상급자의 명령에 의한 조직운영이다.
- ② 프로세스 조직모형에서 경영관리의 핵심은 팀제이다.
- ③ 네트워크 조직모형에서는 외부조직과도 수평적 연계관계를 구축한다.
- ④ 학습조직은 지식을 창출·획득·확산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폐기하는 데에도 능숙한 조직이다.
- ⑤ 팀조직에서 구성원들은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 한다.

해설

- ① (×) 비전구동형 조직은 정보혁명으로 인해 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서 전통적 계층제 조직으로는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없어 제안된 조직이다. 상급자의 명령·지시에 의한 조직운영이 아니라, 상·하급자 상호간 대화와 질문을 통해 업무의 계획을 조정하거나 미래의 비전을 창출하는 형태의 조직이다.
- ┐ 명령/지시 구동형 조직 :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하급자가 기계부품처럼 움직이는 방식
 - └ 비전/목적 구동형 조직 : 일하는 사람들의 자율적인 지적 능력을 공동의 비전 아래 통합하는 방식

답 ①

12 근무성적평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표식 방법은 연쇄적 효과(halo effect)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 ② 강제배분법을 사용하면 관대화(leniency tendency), 집중화(central tendency)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 ③ 기관의 전체 평정대상자를 대상으로 직급별 평정 등급 및 평정점을 정할 때 강제배분법이 적용될 수 있다.
- ④ 다면평가는 능력의 개발이나 목표의 성취보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치중하게 할 수 있다.
- ⑤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상급자가 하급자의 실적기준으로 사용할 목표를 지시·설정해 주고 일정 기간 동안 목표의 달성 수준을 평가한다.

해설

- ⑤ (×) 목표관리제(MBO식) 평정법은 **상관과 부하가 합의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대한 진척상황을 정기적인 면담 등을 통해 검토하여 진행시키 나간 다음 목표 달성 여부를 근거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답 ⑤

13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 2요인이론에서 위생요인이 아닌 것은?

- ① 작업조건 ② 보수 ③ 승진 ④ 동료와의 관계 ⑤ 직업의 안정

해설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 2요인론 - 불만요인과 만족요인 비교

불만요인(dissatisfier) = 위생요인(hygiene)	만족요인(satisfier) = 동기요인(motivator)
• 불만 유발 또는 불만 해소에 작용 • 생산성 향상과 직접적 관계 없음(필요조건에 불과). • 불만요인 제거시(충족시) 불만 없는 상태가 됨. • 불만요인 제거시(충족시) 만족으로 연결되지 않음.	• 만족 또는 직무수행 동기유발에 작용 • 생산성 향상과 직접 관련됨(충분조건). • 만족요인 불충족시 만족 없는 상태가 됨. • 만족요인 불충족시 불만으로 연결되지 않음.
• 환경·직무수행상황 vs 조직구성원 • 직무 외적이고 물리적·환경적인 요인	• 직무 자체 vs 조직구성원 • 직무 내재적·심리적 요인(내적 보상·자아실현)
조직의 정책·관리·관행·규칙, 감독(리더십의 질), 근무환경·작업조건, 안전, 근무시간, 지위나 직위, 청년, 신분안정(직업적 안정), 복지시설, 보수, 대인관계(상사·동료·부하직원과의 인간관계)	직무상 성취감(자아실현)·인정감, 직무자체·직무내용(보람 있고 도전적인 일), 개인의 성장(승진)·발전·자아개발, 직무충실화(job enrichment), 직무성과, 직무상 책임 증대, 칭찬

답 ③

[관련기출] 허즈버그(F. Herzberg)가 주장한 만족요인·동기요인으로만 구성된 것은?

2007 국회8급

- ① 보수, 대인관계, 작업조건 ② 성취감, 책임감, 직무내용 ③ 보수, 직무내용, 작업조건
- ④ 승진, 직무내용, 대인관계 ⑤ 성취감, 대인관계, 작업조건

답 ②

[관련기출] 허즈버그(Herzberg)가 제시한 동기요인이 아닌 것은?

2016 행정사 / 2016 경찰간부

- ① 성취감 ② 책임감 ③ 보수 ④ 안정감 ⑤ 승진

답 ③

[관련기출] F. Herzberg의 욕구충족2요인론에서 제시하는 동기요인인 것은?

2011 인천전환특채

- ① 직무환경 ② 대인적 요인 ③ 승진 ④ 동료 간 관계

답 ③

[관련기출] 허즈버그(F. Herzberg)가 주장하는 위생(hygiene)요인이 아닌 것은?

2004 서울9급(2)

- ① 자아개발 ② 보수 ③ 작업조건 ④ 회사 및 조직의 정책 ⑤ 상관과의 관계

답 ①

14 전통적 예산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개의 원칙은 예산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② 사전 의결의 원칙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입법부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③ 통일의 원칙은 정부의 회계장부가 하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④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회계와 목적세는 예산 통일의 원칙의 예외이다.
- ⑤ 한정성의 원칙에 의하면 예산은 지정된 목적 외에 사용이 금지된다.

해설

- ③ (×) 정부의 회계장부가 하나여야 한다는 원칙은 예산은 가능한 한 단일하게 편성되어야 한다는 단일성 원칙과 관련된다. 통일성 원칙은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접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며 모든 세입은 하나의 국고금으로 수납되고 모든 세출은 세입원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국고금에서 일반적 목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답 ③

[관련기출] 예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 경찰간부

- ① 정부가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직접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성 원칙의 예외로는 예비비, 계속비가 있다.
- ② 특별회계는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고, 목적세는 공개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 ③ 예산한정성의 원칙 중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인 질적 한정 원칙은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 ④ 준예산제도는 사전의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고, 예산의 이용은 한계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 ⑤ 통일성 원칙은 회계장부가 하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답 ④

[관련기출] 전통적 예산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지방9급

- ① 예산단일의 원칙은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접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② 예산공개 원칙은 예산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③ 예산사전의결의 원칙은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④ 예산완전성의 원칙은 모든 세입과 세출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답 ①

[관련기출] 예산 통일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7 국가9급

- ① 국가의 예산은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② 모든 수입은 국고로 납입되고 거기에서 모든 지출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③ 특정수입으로 특정지출을 충당하도록 한다.
- ④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답 ②

[관련기출]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짝 지은 것은?

2015 서울9급

-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모든 수입은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에서부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① ㉠ 예산 단일의 원칙, ㉡ 예산 총계주의 원칙 ② ㉠ 예산 총계주의 원칙, ㉡ 예산 단일의 원칙
③ ㉠ 예산 통일의 원칙, ㉡ 예산 총계주의 원칙 ④ ㉠ 예산 총계주의 원칙, ㉡ 예산 통일의 원칙

답 ④

15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안 편성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 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예산안편성 지침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앙 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각 중앙관서장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등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가 취합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정부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설

- ⑤ (×) 정부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 ⑤

[관련기출] 「국가재정법」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 국회8급

①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답 ④

16 국가의 정부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며, 이는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는 이점이 있다.

② 제한경쟁입찰은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여 경제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③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따라 특정 다수인을 지정해 경쟁시키는 방법은 담합의 여지가 존재한다.

④ 수의계약은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⑤ 정부가 체결하는 공법상의 계약이므로 민법상 계약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⑤ (×) 정부(국가)가 체결하는 공법상의 계약이지만 권력주체로서의 우월적 지위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이므로 원칙적으로 민법상 계약 원칙이 적용되며, 다만 공법원리나 공법 규정에 의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정부계약의 방법

경쟁(競爭)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자유경쟁, 기회균등을 전제로 불특정다수의 입찰희망자를 입찰에 참가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에게 낙찰. 가장 공정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부실업체 참여와 품질저하 초래 가능.
	지명경쟁입찰	기술력·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다수의 경쟁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 지명된 자 간의 담합 우려가 있음
	제한경쟁입찰	입찰참가자의 자격기준(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을 제한하여 입찰에 참가시킴. 능력 있는 자를 참여시킬 수 있음.
수의(隨意)계약	계약기관이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여 계약. 경비는 절감하지만 부정을 초래하기 쉬움	

답 ⑤

17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 대상별로 분류·편성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파악할 수 있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을 업무 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해 편성한다.

③ 영기준 예산제도는 과거의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④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킨다.

⑤ 계획예산제도는 정보와 의사결정권한이 과도하게 중앙집권화되는 경향이 있다.

해설

① (×)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 대상별로 분류·편성(예 인건비, 물건비 등)하므로 무엇(what?)을 구매하는지 알 수 있지만, 왜(why?) 구매하는지 알 수 없다(투입과 산출의 연계 부족). 따라서 정부사업의 성격 파악과 사업성과 평가가 곤란하다.

답 ①

[관련기출] 여러 예산제도의 장·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0 지방9급

- ① 영기준예산제도는 점증주의적 예산편성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개발되었다.
- ② 계획예산제도는 목표·계획·사업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으나 과도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 ③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산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업무단위 선정 및 단위원가 계산이 어렵다.
- ④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항목을 엄격히 분류하므로 사업성과와 정부생산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답 ④

[관련기출]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1 국회9급

- ① 품목별예산제도에서는 지출항목을 너무 엄격하게 분류하여 전반적인 정부 기능 혹은 전체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 ② 성과주의 예산서에는 전형적으로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고 성취될 업무량에 대한 측정, 업무가 완료될 경우 효율성,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 등이 포함된다.
- ③ 자본예산제도에서는 정부지출을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하고 경상적 지출은 경상적 세입인 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
- ④ 계획예산제도는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의회의 지지를 받았다.
- ⑤ 객관적 기준을 사용하는 계획예산제도와는 달리 영기준 예산제도는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의사결정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많이 의존한다.

답 ④

[관련기출] 품목별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지방9급

- ①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유리한 통제지향 예산제도이다.
- ② 정부활동의 중복 방지와 통합·조정 유리에 예산제도이다.
- ③ 지출 대상에 따라 자세히 예산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예산 심의가 용이하다.
- ④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답 ②

18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의 전용은 입법과목인 장·관·항 사이의 상호 융통으로 반드시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계상한 것이다.
- ③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
- 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이후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편성하는 것이다.

해설

- ① (×)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인 세항·목 사이의 상호융통으로 국회의 사전의결은 필요 없으며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하거나, 각 중앙관서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전용이 가능하다.

■ 이용·전용·이체의 구별

구분	이용	전용	이체
내용	입법과목(기관·장·관·항)간 상호융통(사업 내용·규모의 변경)	행정과목(세항·목) 간 상호융통(동일 사업에 관한 지출 대상의 변경)	정부조직 관련 법령 제정·개정·폐지 조 무·권한 변동시 예산도 변동
	사용 목적의 변경 → 질적 한정성(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		사용 주체(소속)의 변경
국회 사전의결	필요(원칙)	필요 없음	필요 없음
주체	중앙관서의 장(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하거나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한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가능)		기획재정부 장관
내역 제출	중앙관서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용·전용·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		

- ② (○)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③ (○) 국가재정법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 ①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 ④ (○)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①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 ⑤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여 성립한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이다.

답 ①

[관련기출] 예산집행의 신속성 보장 제도에 대한 틀린 설명은?	2013 국회9급(수정)
①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총액에 대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② 예산의 전용은 입법과목인 장, 관, 항 사이의 상호용통으로 반드시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⑤ 예산이체제도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직무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변동되는 제도이다.	

답 ②

[관련기출] 예산집행의 신속성 유지 방안에 관한 옳은 설명은?	2017 교육행정9급
①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이후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②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이다. ③ 예산의 전용은 장 — 관 — 항 간의 용통을 의미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	

답 ④

19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위정부의 참여자로서 이익집단, 관료조직, 의회의 위원회가 포함된다.
- ② 정책공동체에는 하위정부모형의 참여자 이외에 전문가집단이 추가된다.
- ③ 정책공동체에서는 참여자의 전문지식으로 갈등 없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 ④ 이슈네트워크에서는 참여자들의 진입 및 퇴장이 매우 쉬운 편이며, 네트워크의 경계가 불명확하다.
- ⑤ 이슈네트워크에서는 전문지식과 정보를 많이 보유한 행위자들의 이해가 최종 정책 산출에 많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해설

- ③ (×) 정책공동체모형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특정 정책분야별로 구성되며 구성원은 학회, 세미나, 자문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하고 비판·평가한다. 정책 문제의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구성원 간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공유하는 상호 협력적·의존적 관계**이며, 정책결정을 둘러싼 권력게임은 승패가 아니라 positive-sum game(정합게임)이며 협력적이라고 본다.

답 ③

☞ 정책공동체와 이슈네트워크(이슈망)

구분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 이슈망)
정책 행위자	제한적·폐쇄적임 정부부처, 의회의 상임위원회, 특정 이익집단, 전문가 집단 ... 조직화된 행위자에 한정 (조합주의처럼 제도화된 관계에는 이르지 못함)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공유하고 협조(이해 공유도 높음)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가짐 기본관계는 교환관계	개방적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 조직화된 이익집단뿐만 아니라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 전문가, 언론 등 모든 이해관계자 . 이슈에 따라 수시로 변동. 상황에 따라 중시되는 자원의 종류나 주도적 행위자도 다르며(이슈 성격에 따른 이합집산). 자기이익 극대화(이해 공유도 낮음) 자원보유의 격차 존재 기본관계는 교환관계가 아닌 자문수준
행위자간 관계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경계의 개방성 낮음) 비교적 균등한 권력 보유 (공동의 서비스전달체계의 책임은 수직적 상호의존관계를 지님.) 상호 협력적·의존적 관계(수평적) . 상호의존성 강함 positive sum game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관계(경계의 개방성 높음) 불균등한 권력 보유 (권력 편차 심함) 연합형성 전략 경쟁적·갈등적 관계(수평적) . 상호의존성 약함 zero sum game 또는 negative sum game
유형의 구조화	빈번한 상호작용 안정된 구조적 관계로 유형화(언어, 가치관, 문화 등의 공유)	상호작용 빈도 낮음 개별행위자들로서 특별한 구조가 형성되지 않음
정책산출 (정책결정)	처음 의도한 내용대로의 정책산출(예측 용이) 정책산출(결정된 정책내용)과 집행의 결과 유사	결정과정에서 정책내용의 변동(예측 곤란) 정책산출과 집행의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음
국가의 역할	국가는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행위자이다. 국가기관의 범주에는 행정부, 의회, 사법부 모두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국가라는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개별 행위자로 간주된다.	

하위정부,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의 비교

구분	하위정부(철의 삼각)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정책쟁점망, 이슈망)
행위자(actor ; 참여자)	이익집단, 의회 상임위원회, 행정관료	하위정부의 삼자 외에 전문가 추가 (제한된 멤버십)	정책공동체보다 행위자가 확대됨 (다양하고 이질적인 집단)
관료의 역할	특수이익집단 이익에 종속 공익과 이익집단의 이익 조정	관료의 적극적 역할	쟁점에 따라 주도적 역할 또는 방관자 역할
관계의 지속성·안정성	안정적·지속적	비교적 안정적(멤버십의 연속성)	불안정(일시적·유동적)
행위자간 연계 (linkages)	동맹관계	의존적·협력적 관계	경쟁적·갈등적 관계
	강한 결합(안정적 협력관계)	↔ 약한 결합(공개적인 갈등 상황)	
정책네트워크의 경계	명확한 경계(폐쇄성)	↔ 희미한 경계(개방성)	

[관련기출] 정책 관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7 교육행정9급

- ① 이슈네트워크모형에서는 참여자들의 관계를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로 가정한다.
- ② 하위정부모형에서는 정책결정이 참여자들 사이의 협상과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 ③ 정책지지연합모형에서는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단위로 정책하위체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 ④ 정책공동체모형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정책 문제의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본다.

답 ①

20 정책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지지연합모형에서는 정책학습을 단기적이고 급진적인 정책변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으로 본다.
- ② 정책흐름모형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 변동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③ 정책패러다임 변동모형은 패러다임 변동으로 정책 목표와 정책수단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 ④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은 정책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위상변동이 정책 내용의 변동을 가능케 한다고 본다.
- ⑤ 단절균형모형은 정책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해설

- ① (x) 정책지지연합모형에서는 정책학습을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정책변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으로 본다. 정책옹호연합모형 상향적 접근법과 하향적 접근법의 특성을 결합하여 하나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기본적 관점은 상향적 접근법의 분석단위를 채택(정책하위체제에서 시작되어 정책이 변동됨)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와 사회경제적 상황, 법적 수단들을 고려하는 하향적 접근을 결합한다. 정책변동을 정책하위체제 내의 핵심신념에 기초한 정책옹호연합의 상호작용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책지향적 학습, 사회경제적 변동과 정치체제구조의 변화로 본다. 특히 정책학습을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정책변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으로 파악하는데, 정책학습을 통해 정책옹호연합을 구성하고 특정 신념을 공유하는 행위자들의 신념체계를 변화시키고, 점진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정책변화를 이끌어 낸다.

답 ①

21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방법에서 정책집행의 성공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인과 관계를 확보해야 한다.
- ② 정책 대상집단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법령과 지침이 필요하다.
- ③ 정책이 정책집행 현장의 상황에 맞게 적응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④ 결정된 정책에 대해 다수의 이해관계 집단이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
- ⑤ 정책이 집행되는 동안 정책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해설

③은 상향적 접근방법의 특징이다.

효과적 정책집행을 위한 이상적 조건(하향적 접근) - 사바티어(P. Sabatier)와 마즈매니어(D. Mazmanian)

- ①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것일 것.
- ② 정책내용으로서 법령은 명확한 정책지침을 지니며, 대상집단의 순응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될 것(법적 구조화).
- ③ 유능하고 헌신적인 집행관료가 정책집행을 담당할 것.
- ④ 결정된 정책에 대해 조직화된 이익집단, 유권자, 입법가, 행정부의 장으로부터 지속적 지지를 받을 것
- ⑤ 정책목표는 안정적이어서, 집행과정 동안 법령에 규정된 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하며, 상충되는 정책이나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의해 기존의 정책이 현저하게 달라지지 않을 것

답 ③

[관련기출] 하향식 접근방식의 정책집행연구가 주장하는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조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국회9급
① 한 번 정해진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인과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를 통제해야 한다. ③ 집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과 지침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④ 정책목표와 정책결정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⑤ 집행현장의 일선공무원에게 적절한 재량과 자율이 주어져야 한다.	

답 ⑤

[관련기출] 사바티어(P. Sabatier)와 마즈매니언(D. Mazmanian)이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 전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011 지방9급
①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② 법령은 명확한 정책지침을 가지고 대상 집단의 순응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③ 정책목표의 집행과정에서 우선순위를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④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정책집행을 담당해야 한다.	

답 ③

[관련기출] 정책집행에 대한 고전적인 하향적 접근법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2 국회9급
① 정책이 집행되는 동안 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말아야 한다. ②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③ 정책목표의 우선순위가 명료하여야 한다. ④ 유능하고 헌신적인 집행관료가 정책집행을 담당하여야 한다. ⑤ 정책집행 담당자의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답 ⑤

22 정책 관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대안을 채택한다고 본다.
- ② 만족모형은 미래에 발생할 현상을 예측하고 모든 대안을 검토한 후, 가장 만족스러운 대안을 채택한다.
- ③ 쓰레기통모형은 정책문제, 문제의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 등의 요소가 개별적으로 떠다니다가 우연한 계기로 교차되면 정책결정이 된다고 본다.
- ④ 최적모형은 기존의 계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직관적 판단에 의한 결정도 중요하다고 본다.
- ⑤ 회사모형은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불확실성의 회피, 조직의 학습, 표준운영절차(SOP)의 활용 등을 특징으로 한다.

해설

- ② (×) 만족모형의 경우 실제의 의사결정자는 모든 대안을 탐색하지 않고 몇 개의 대안만 탐색하며, 대안의 탐색은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이뤄진다고 본다.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인 대안의 탐색을 하며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을 때까지 계속된다. 주관적으로 만족할만한 대안을 선택하며 최적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다.

합리모형과 만족모형의 비교

구 분	합리모형(이상적·규범적·연역적 모형)	만족모형(현실적·실증적·귀납적 모형)
정책결정자	경제인 - 전지전능(全知全能) 포괄적 합리성, 완전한 합리성(완전 정보)	행정인 - 현실적 인간(인지능력의 한계) 제한된 합리성(불완전 정보)
합리성	객관적 합리성	주관적 합리성
대안탐색	모든 대안을 광범위하게 탐색	몇 개의 대안(만족대안을 찾을 때까지 순차적·무작위적 탐색)
결과예측	복잡한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결과를 예측(총체적 예측)	불확실한 상황을 단순화, 대안의 중요한 결과만 예측(부분적 예측)
대안선택	최적(optimum) 대안 - 최적화 기준, 전체최적화	만족할 만한(satisficing) 대안 - 만족화 기준, 부분최적화

답 ②

[관련기출] 정책결정모형 중 사이먼(Simon)의 만족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6 경찰간부
① 합리모형에서 가정하는 의사결정자는 경제인이고, 만족모형에서 가정하는 의사결정자는 합리성의 제약을 받는 행정인이다. ② 경제인은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모든 가능한 대안 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지만, 행정인은 만족할 만한 대안의 선택에 그친다. ③ 경제인은 불확실성이나 불충분한 정보 등으로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나, 행정인은 동태적 상황을 고려하여 대안의 결과예측을 시도한다. ④ 실제의 의사결정자는 모든 대안을 탐색하지 않고 몇 개의 대안만 탐색하며, 대안의 탐색은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답 ③

23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 모형 중 정책집행자의 권한이 가장 강한 유형은?

- ① 협상형(bargainers) ② 관료적 기업가형(bureaucratic entrepreneur)
 ③ 고전적 기술자형(classical technocrats) ④ 지시적 위임형(instructed delegates)
 ⑤ 재량적 실험가형(discretionary experimenters)

해설

• 나카무라(R. 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의 정책집행자 유형

구 분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위임자형	협상자형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
정책 목표	추상적 목표	결정자	결정자	협상 결과에 따라 역할 분담	결정자	집행자
	구체적 목표	결정자	결정자		집행자	집행자
정책 수단	행정적 수단	결정자	집행자		집행자	집행자
	기술적 수단	집행자	집행자		집행자	집행자
정책집행자의 재량		재량권 적음 < > 재량권 많음				
정책평가기준		효과성	효과성, 능률성	지지자의 만족도	수혜자에 대한 대응성	체제유지도

답 ②

[관련기출]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가 제시한 가장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 정책집행자의 유형은?

2017 지방7급

- ① 지시적 위임자형 ② 관료적 기업가형 ③ 협상가형 ④ 재량적 실험가형

답 ②

24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허즈버그(Herzberg)는 작업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의 만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매슬로우(Maslow)는 높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로 욕구의 퇴행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③ 맥그리거(McGregor)의 Y이론형 인간 및 아지리스(Argyris)의 성숙모형의 인간은 허즈버그(Herzberg)의 위생요인에 의해 동기부여 받을 가능성이 높다.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는 노력이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expectancy), 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instrumentality), 보상에 대한 주관적 선호(valence)의 세 가지 요인이 동기 부여 정도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⑤ 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에서는 보상의 절대적 크기가 클수록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느낀다고 주장한다.

해설

- ① (×) 허즈버그(Herzberg)의 2요인이론에서 작업조건은 불만(위생)요인이므로 작업조건 개선은 불만을 제거할 뿐,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
 ② (×) 매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이론에 따르면 다섯가지 욕구가 하위 단계에서 상위단계 욕구로 순차적 연속적으로 발현한다고 보는 만족·진행접근법을 취한다. 반면,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에 따르면 높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의 욕구로의 좌절·퇴행도 가능하다고 본다.
 ③ (○) 맥그리거(McGregor)의 Y이론형 인간 및 아지리스(Argyris)의 성숙모형의 인간은 허즈버그(Herzberg)의 만족(동기)요인에 의해 동기부여 받을 가능성이 높다.
 ④ (○) • 브룸의 기대선회이론에서 동기부여의 강도: $M = \Sigma(V \cdot I \cdot E)$

E 기대	개인의 능력(A)으로 일정한 행동(노력)을 할 경우 실제 성과(1단계 결과)를 거두리라 기대(E)할수록 *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할까?
I 수단성	실제성과(1단계 결과)가 승진이나 보상 등 개인이 원하는 결과(2단계 결과, 보상)를 가져오리라고 기대(I)할수록 * 좋은 성과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V 유인가	또한 그 결과(2단계 결과, 보상)에 대한 개인의 선호(V)가 강할수록 * 받게 될 보상이 내게 얼마나 매력적이고 나의 목표에 맞는 것일까?

동기부여
⇒ 강도(M)
강화

- ⑤ (×) 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에서는 구성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자신과 준거인의 산출/투입 비율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공정성을 따지며 보상의 절대적 크기를 중시하지는 않는다.

답 ④

[관련기출] 조직구성원들의 동기이론에 대한 옳은 설명은?

2014 국가9급

- ㉠ ERG이론 : 앨더퍼(C. Alderfer)는 욕구를 존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로 구분한 후 상위욕구와 하위욕구 간에 '좌절-퇴행' 관계를 주장하였다.
 ㉡ X·Y이론 : 맥그리거(D. McGregor)의 X이론은 매슬로우(A. Maslow)가 주장했던 욕구계층 중에서 주로 상위욕구를, Y이론은 주로 하위욕구를 중요시하였다.
 ㉢ 형평이론 : 아담스(J. Adams)는 자기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을 준거인물과 비교하여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고 주장하였다.
 ㉣ 기대이론 : 브룸(V. Vroom)은 보상에 대한 매력성, 결과에 따른 보상, 그리고 결과발생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동기유발의 강도가 좌우된다고 보았다.

- ① ㉠, ㉡ ② ㉠, ㉢ ③ ㉡, ㉣ ④ ㉢, ㉣

답 ②

[관련기출]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3 국회8급

- ① 매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론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중 욕구, 자기실현 욕구의 5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하위계층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계층의 욕구가 나타난다.
- ② 허즈버그(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에 따르면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해서 모두 동기부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욕구는 충족되어도 단순히 불만을 예방하는 효과밖에 없다. 이러한 불만 예방효과만 가져오는 요인을 위생요인이라고 설명한다.
- ③ 애덤스(Adams)의 형평성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 비교대상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보다 크거나 작다고 지각하면 불형평성을 느끼게 되고, 이에 따른 심리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형평성 추구의 행동을 작동시키는 동기가 유발된다고 본다.
- ④ 엘더퍼(Alderfer)는 매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론을 받아들여 한 계층의 욕구가 만족되어야 다음 계층의 욕구를 중요시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한 계층의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바로 하위 욕구의 중요성이 훨씬 커진다고 주장한다.
- ⑤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의하면 동기의 정도는 노력을 통해 얻게 될 중요한 산출물인 목표달성, 보상, 만족에 대한 주관적 믿음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특히 성과와 보상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인 기대치의 정도가 동기부여의 주요한 요인이다.

답 ⑤

25 지방교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 간 균형화와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 ②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포함한다.
- ③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의 정치적 의도나 정책적 의지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규모를 예측하기 힘들다.
- ④ 특별교부세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정부에 교부할 수 있다.
- ⑤ 2015년 1월 1일부터 분권교부세를 폐지하여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설

- ① (○) 지방교부세는 수평적 조정으로서 지방재원 간 균형화 기능을 하며(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게 더 많이 배분), 수직적 조정으로서 국가재원으로 지방정부 재원에 대한 지원 기능을 한다.
- ② (○)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다.
- ③ (×) 보통교부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수준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를 산출하고 지방세 등 일반재원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일반재원으로 보전하는 재원이다. 교부기준은 매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재정력지수 1 미만)하는 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에 조정율을 곱하여 지급한다.

$$\text{보통교부세액} = \text{재정부족액[미달액]} \times \text{조정율} = (\text{기준재정수요액} - \text{기준재정수입액}) \times \text{조정율}$$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상회(재정력지수가 1 초과)하는 경우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다.

- ④ (○) • 특별교부세 교부기준(지방교부세법 9조)

재난안전수요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50%
지역현안수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40%
시책수요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

- ⑤ (○)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일반재원)으로 2015년 1월부터 폐지하여 보통교부세로 통합하였다.

답 ③

[관련기출]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2013 전환특채(수정)

- ① 보통교부세는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교부되는 특정재원이므로 재원의 사용용도에 제한이 따른다.
- ②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교부하는 특정재원이다.
- ③ 특별교부세는 재난복구 등 특정한 용도로 지급되는 교부세이다.
- ④ 부동산교부세는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재원이다.

답 ①

[관련기출]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07 전남9급(수정)

- ①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교부한다.
- ② 보통교부세는 지방재정수요액과 지방재정수입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교부한다.
- ③ 특별교부세는 특수한 사정으로 발생한 재정수요 충당을 위하여 교부한다.
- ④ 부동산교부세는 수입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답 ④